

투데이

전남도 F1 경주장 인수, 도의회 선택은

지방재 1980억 발행 행안부 승인마쳐
20일 임시회 최종 승인절차 귀추 주목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장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1980억원의 지방재 발행이 승인됐다. 하지만, 전남도가 실제 지방재를 발행해 F1경주장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최종 승인절차를 거쳐야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13일,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F1 경주장(37개 동 3만9000m²)을 인수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수립에 관한 건'과 경주장 인

수 재원 조달을 위해 198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2011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F1경주장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1980억원의 지방재 발행 승인이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전남도는 도의회에 'F1 경주장 부지 양수 및 준공 처리'를 위해 19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앞서 전남도의 제정상태를 진단, 지방재를 발행하더라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4%에 이르지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지방재 발행 승인으로 이자율이 7%대인 PF 금리보다는 저렴한 4%대 이자로 인수재원을 마련하게 됐고 또 F1 경주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등록할 경우 연간 최대 50억원의 보통교부세 수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20일부터 29일 까지 10일간 열리는 '제 262회 전남도 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뒤 9월까지 경주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법인인 '카보'(KA-

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의 부채 1980억원을 전남도가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들이 모두 빠져나간 자리를 전남도가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만 수백억원의 적자를 냈고 향후 수익성이 불투명한데다, 정부조차 지난해 확정한 국비 지원 예산(200억) 중 103억만 지원키로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도의회 승인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전남도는 다음달 말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한 뒤 전남개발공사에 경주장 운영을 위탁하고 카보의 토지 개발권도 인수해 J프로젝트 삼포지구 토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추석 연휴기간인 10~13일 임시 개방된 광주시 남구 영산강 승촌보 전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3일 이번 개방기간 승촌보를 다녀온 관광객이 10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승촌보 조성 사업은 보(洑)를 비롯, 공원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 조성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22일 준공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 신사옥 입찰 1853억(예정가 67%) 대우컨소시엄 수주

지역 건설사 우미·동광·진양 참여...이달말 착공

대우컨소시엄이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 분사 신사옥 건립공사를 수주했다.(조감도)

13일 한전과 지역 건설업체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적용한 한전 본사 신사옥 건립공사 입찰 결과, 대우컨소시엄이 현대, 포스코 컨소시엄을 제치고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추정금액(2766억 1700만원) 대비 67%인 1853억 3000만원을 투찰해 수주에 성공했다.

나주에 조성 중인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한전 신사옥은 14만9372㎡의 대지에 연면적 9만 3222㎡,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로 지어진다. 이달 말 착공해 오는 2014년 8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대표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은 이 사옥을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



지를 이용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각종 에너지 저감 신기술을 도입해 친환경 녹색빌딩을 구현, 최고의 에너지 랜드마크로 지을 계획이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CCTV 통합센터 사업자 선정 관심

오늘까지 제안서·입찰등록서류 접수

광주시가 교통단속과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할 예정인 폐쇄회로TV(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자로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광주시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약 43억 원을 들여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청사 2층에 600㎡ 규모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최근 긴급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4일까지 관련업체로부터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통합관제센터는 내년까지 5개 자치구에 산재해 있는 방범용, 어린이 보호용,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기기 적발용 CCTV 2000여대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범죄가 발생할 때 영상정보를 즉각 확인할 수 있어 범죄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일까지 관련업체로부터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으로 예상된다.

이번 입찰에는 KT, SK 브로드밴드, LGU+ 등 국내 유수 통신업체가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업체는 자체 사업비를 들여 회선망을 구축하고, 10년 동안 막대한 회선사용료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며 때문이다.

특히 광주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선점 효과를 누릴 가능성도 높다. 광주시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이달 중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14일까지 관련업체로부터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통합관제센터는 내년까지 5개 자

치구에 산재해 있는 방범용, 어린이

보호용,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기기

적발용 CCTV 2000여대를 통합 관리

함으로써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범죄가 발생

할 때 영상정보를 즉각 확인할 수 있

어 범죄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

을 예상된다.

으로 예상된다.

이번 입찰에는 KT, SK 브로드밴드,

LGU+ 등 국내 유수 통신업체가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합관제

센터 운영업체는 자체 사업비를

들여 회선망을 구축하고, 10년 동안

막대한 회선사용료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으로 예상된다.